

“무분별한 태양광 허가 급증”

김철수 도의원, 5분발언서 “부작용 속출 주민갈등 심화 농업본원 기능상실 가능성 검토 없는 형식적 허가 그쳐”

2005년 5건에 불과했던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건수가 2017년에는 1만 건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급증하면서 농업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에 나선 김철수 의원(정읍1)은 “투기양

상으로까지 번진 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주민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며 태양광 시설 허가실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김 의원은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와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환경파괴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건수는 2015년, 986건에

118MW에 불과했지만, 2017년은 1만 517건에 허가용량도 1,845MW를 초과하며 10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올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농업용저수지에 허가된 태양광 용량은 54.9MW로 2015년과 비교해 87배나 증가했는데, 태양광저수지가 본래 농업 목적을 저버리고 전복농업의 근간마저 위협할 정도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농업용저수지 태양광시설의 경우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농업본원의 기능상실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기술적 검토만 떨어지면 사실상 서류상으로 끝나는 형식적 허가에 그쳤다”며 형식적인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태양광 허가단계부터 주민 동의를 구하는 수용성 검토도 없었고 지난해 전북도의 허가건수가 2천건이 넘었지만, 전담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시설현장 점검 엄두도 못 낸다”면서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군과 합동으로 농촌 태양광의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부서와 사전협의 거쳐 농업농촌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전북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연동형 비례제 기본 방향 동의? 악마가 숨어있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 민주당 반응 관련

천정배 민주당 평의회 의원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한 최근 민주당의 반응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표현했다. 거기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거기에 자기를 득권을 위한 왜곡된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판 소리 하지 말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하고 자기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13일 민주당 평의회 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다고 흔쾌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꼭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과 같은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2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걸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여론에도 밀리고 야당의 단식 투쟁에 신경을 써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민심그대로선거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

천 의원은 “민주당의 현재의 태도는 극히 안이하고 득권권 지향적이다.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나경원 “임시국회 소집 추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이후 처음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여야는 원래 1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두 축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탄력근로제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고 단위기간 연장문제에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당선에 대해 “이번 선거는 통합과 미래를 선택한 것”이라며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우리당에 오면서 계파 깨뜨리기가 시급했고 계파중식의 완성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라고 주장했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위한 제조 혁신, 미룰 수 없는 과제”

문 대통령, 중기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서

“중소 제조혁신 예산 1조2천억...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노후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제조혁신 거점 조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다. 국내기업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의 84%를 담당한다”며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GDP대비 30%에 가까운데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 중국, 일본보다 높다”며 “그야말로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제조업의 강국으로 이끌어 온 중심지가 바로 이곳 경남이다. 창원, 거제, 거제도,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공장이 바쁘게 돌아갈 때 우리 경제도 함께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

유도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조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이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며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마트산단 추진을 포함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으로 1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릴 것”이라며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50%에 해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1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000개를 육성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스마트공장이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정과 품질 개선, 제품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도록 일터도 혁신하겠다.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위험, 유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30% 감소시키겠다”며 “내년부터 스마트공장 도입 예산으로 협업로봇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생산의 70%는 산업단지에서 이뤄진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바꾸어 제조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스마트공장도 개별기업 차원보다 산단 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선도 스마트 산단 2곳을 지정하고, 22년까지 10곳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하고, 교통·주거, 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조혁신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일괄 지급... ‘취학 전’ 단서 삭제

1월부터 0-5세에 월 10만원씩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무관하게 만 7세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학 전’이라는 조항이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학 전’ 규정을 삭제했다.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범위 내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또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

까지 차등지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기간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0만원을 받는 수급자에 대해 일부 연금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수급자 150만 명 중 10만~20만 명 정도가 연금액이 감액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미 기초연금제도 안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경제구간에 있는 분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액구간을 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스

www.sulmuseum.kr (www.술박물관.kr)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THEME MUSEUM OF KOREAN LIQUOR | 酒

수정형유물전시관 | 세계의 술 | 주점재현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은 경각산과 구이저수지가 맞닿아 있는 수려한 경관을 담아 물방울처럼 피어나는 술을 형상화한 원형의 자연 친화적인 박물관입니다. 연중 다양한 전시와 교육·체험프로그램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5만 5천 여점의 유물을 통해 태곳적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술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덕천전원길 232-58 Tel. (063)290-3842~7
블로그 blog.naver.com/sulmuseum | Facebook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 Instagram sulmuseum